

신자유주의 시대 공영방송의 위기와 공공영역의 변화*

이상훈**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물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나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공공영역, 미디어 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 헤게모니

1. 서언

최근 들어 언론 권력과 국가 권력 간의 상관관계는 현재 우리에게 언론, 의사소통, 미디어 등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극을 주고 있다.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은 민중의 사회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권력 체계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들 간의 권력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민사회, 일반인의 생활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그 합리성의 논리조차 의심받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의도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학계, 전문가 등 소위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언론, 신문 방송, 미디어의 정치적 환경과의 관계나 성격(언론의 권력과 자본과의 관계,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미디어의 공공성 논리와 산업논리 등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던 영역들에게 까지)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치열한 논쟁을 거치지 않고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동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통과 이후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이용하여 새로운 미디어법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런 통로가 없는 다른 영역은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hoon@jbnu.ac.kr)

나 혹은 어떤 방식을 가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문화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산물은 단순히 문화의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경제적인 양상과 혼재되어 있다. 오히려 대중소비사회, 자본주의사회의 모델을 토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 내적 양상들이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문화산업으로서의 성격과 토대) 미디어의 성격이나 특성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언론, 미디어의 자본주의적 패턴을 정형화시키려고 한다. 자본과 생산, 상품의 성격을 문화적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 문화 등의 상황 권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산재해 있으며, 권력에 대한 반격, 대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권력은 이에 대한 반동과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극복이 과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존재양식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위험은 국가, 자본가, 시민 모두가 자본 유통시장에 종속되고 피지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데 있다. 작금의 미국, 유럽의 상황, 금융기업의 몰락위기 등이 그 예다. 결국 예측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모두의 파국인 것이다. 이 외에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다 자승자박이고 제 무덤 파는 격이 된 것이다.

미디어 영역 역시 지금의 공영방송의 위기(어느 나라든 다 겪고 있는,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80년대 초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방송시장개방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미디어 환경을 왜곡시킨 결과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특히 방송의 경우, 과연 공영방송사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공영역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물론 필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공영방송사의 모든 종사자들에 지극히 미안한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니다 라는 말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서 미디어가 지니는 특수한 성격,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연 언론, 즉 저널리즘이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은 믿을 만하고 또 이 신자유시대에 아직 가능한 목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언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여부에 있으며 이 때문에 대답은 실제로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정치와 자본권력의 언론 권력에 대한 의존 역시 중요한 문제다.

이제는 한계와 가능성, 변화와 변혁의 구분이 안 된다. 한계는 공공영역, 공영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틀림없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체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 속에서 내적 변화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우선 신자유주의의 체제 자체가 공영방송사의 개혁을 허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소위 공모의 차원(Halami, 2005)에서 기존 정치, 자본 권력과의 공모, 체제 수준에서의 공모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개인들, 정치가, 자산가, 그리고 저널리스트 등 종사자 간의 공모,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 간의 공모, 특히 최근 미디어법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애매하고 이중적인 입장, 혹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간의 가능한 공모와 협잡 등의 가능성은 내적 변화의 한계에 따른 개혁의 불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공공영역으로서 공영방송의 붕괴 양상

공공영역의 기능은 원칙과 공유된 가치에 근거한다. 그것은 공공의 토론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평등성, 표현과 여론의 자유, 개개인과 그의 의견에 대한 상호 존중이다. 또한 공공영역의 출현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집합적인 해방 운동의 결과이다. 이 운동은 근대화에 상응하는 것이다. 관료주의적 문예보호가 생겨나고 확대되면서 부르주아 개인은 정부 당국에 더 의존하게 되고, 기술 관료의 담론에 대하여 부르주아 개인과 전위적인 기술관료 그리고 기술 비판적 담론의 값싼 판매 간의 공모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생산의 장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미디어영역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된다. 부르디외와 하케가 공히 지적하고 있듯이, 상업적 논리가 자율적인 생산자와 정치적, 미디어적, 국가 관리적인 인간으로 변한 타율적인 생산자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 이 자율적인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특히 저널리즘을 통해서이다(Bourdieu & Haacke, 1994)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지도 또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하여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오락 기능조차도 산업 자본과의 관계로 얽여있어 자본 논리로부터 한 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공공영역으로서의 공영방송의 붕괴 과정의 주요 양상들을 볼 수 있다. 우선, 미디어법에 대하여 공영방송은 퍼블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어떠한 공간도 만들지 못했다. 퍼블릭과 정치권력, 퍼블릭과 민영 방송 간의 커뮤니케이션 말이다. 두 번째 단계, 이제 공영방송은 권력의 결정에 대한 나팔수 노릇만 한다. 의견 교환, 토론, 논쟁의 장이 아니라 알리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세 번째,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자면 ‘이성의 비판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전파’를 의미하는 공공영역이나 그 내용을 주장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공공영역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흔히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언론을 감시견이라고 부른다. 특히 공적영역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언제 우리 언론이 감시견이었을 때가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감시견도 애완견도 아닌 차라리 유기견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 공영방송사는 혼자 떠드는 모놀로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공공영역으로서의 미디어영역은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약자 경로 우대석과 다를 바 없다. 경로효친이나 노약자의 보호라는 본질은 간 데 없고, 구석진 곳에 웅색하게 공간만 내 주고 있는 형국이다. 간신히 유지하는 공간, 힘 없이 앉아 있는 노약자의 모습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1) 신자유주의와 공영방송의 정체성

사실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신자유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도 위기 상황이다.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들이 늘 해왔던, 그래서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위기에 대한 위기감의 확대를 통해 위기를 은폐하고 기존 환경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가피성은 그 기득권 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보다 충실한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며, 만일 위기 극복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바로 반대세력 때문이라는

논리다. 결국 신자유주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를 의미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반대 진영이 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며 이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라는 환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반대편은 끊임없이 배제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장된다는 사실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다른 많은 영역들처럼, 미디어영역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도의 상품화 과정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품화는 공공영역으로서 공공 미디어영역을 상업적 미디어 기업들과 동일한 법칙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상업적 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나침반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미디어영역을, 시청자들을 이끄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공공서비스와 공적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서비스로서는 내용적 문제들, 즉 공영방송에 적합한 콘텐츠 유형과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공적기관으로서의 행정기구의 위상에 준하는 정책들을 준비한다.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은 시청자를 소비자, 즉 고객으로 간주하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은 자본권력의 논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이 행정기구의 위상을 지님으로써 논리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주주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직접 임명하는 형식을 띠고,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는 등 공영방송 거버넌스 체제와 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프랑스를 한 예로 들자면, 우파 사르코지 정권의 미디어법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의 거버넌스 개혁, 수신료 인상, 광고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 즉 신자유주의의 이익과 결부하는 민영방송사를 더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이상훈, 2011). 이를 반대하는 사회당의 논리는 그래서 더 빈약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결국 동일한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처를 따라 얼씨구나 방송시장 개방의 물꼬를 텃던 것은 미테랑 사회당 정부 아니었던가(물론 국영방송사를 민영화시킨 것은 그 후 우파 시락(J. Chirac) 내각 때이긴 하지만 TF1의 민영화를 위한 작업-재정상태, 시청률 등의 사전 준비는 1980년 초반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 바람을 타고 있었다)¹⁾. 이 빈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광고 폐지는 민영방송을 키우고 공영방송을 고사시킨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이 둘은 같은 놈들이거나 아니면 사르코지법이 결국 신자유주의 하의 미디어 구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 표면적으로 비밀관적이거나 위선적이라고 무조건 목소리만 높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Endeweld, 2010).

2) 신자유주의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많은 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그룹은 산업과 금융 이익을 중요시하는 미디어 이외의 그룹으로 그 소유 지배하로 넘어가고 있다. 미디어 환경에서 주요한 변화인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의 미디어, 특히 인쇄매체의 광고시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광고시장 소비의 분할을 야기하는 한편,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는 텔레마케팅, PR, 협찬 등 비미디어 부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1) 프랑스 공영방송사의 민영화에 관해서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방송구조 개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이상훈, 문성철, 2009)을 참조할 것

방송의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공영방송과 미디어 개혁의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루기 힘든 부분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레이아(Correia, 2011)는 미디어가 독립적 지위를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정보 미디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여유로운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디어 편성 조직 내에서의 정보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동일한 개념의 공유, 그리고 편성의 수준 만큼이나 미디어 기업 책임자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정신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코레이아는 미디어 조직이 시장 환경에서도 일종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순수 영리 목적이 아닌 재단이나 협회의 위상과도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그는 기존 미디어가 점진적으로 이 비영리적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즉 원칙적으로 국가 기금과 공동체 기금의 성격을 지닌 기금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일 공영방송사에게 현재 재원의 지원과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사가 형식적으로 공익성을 강화하고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공적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영역에 머물러 있는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공공영역으로서의 공영방송사를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재원 독립성이나 수신료 인상 등을 위하여 현재의 공영방송사에게 공영방송사로서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지니고 있고 그 재원을 어떻게 공적으로 잘 쓸 것인가 하는 계획 따위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차라리 실질적인 공영방송 구축을 위하여 재원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수신료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지를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이상훈, 2011). 그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고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기업, 즉 국가, 소비자, 미디어 노동자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띌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상품화한 다원주의와 다양성

거대한 민영방송사(중편)는 실제로 방송환경의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변화에 맞서나가기야 한다. 물론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새로운 채널은 시청률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년에 들어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비견될 만한 시청률 증가를 보이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의 현황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하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방송의 다양성의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에 달려있다.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민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보호와 확장이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자본화된 집중을 제한하고, 비영리 미디어와 저널리스트 및 방송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메커니즘, 혹은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면, 기존의 보수 정권은 민영 방송사 및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장치들을 재검토하여 작동시키고자 한다. 미디어의 다원주의는 소유권이나 사회적 그룹에 의한 통제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유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소유권을 통해서 잔존하고 있는 모든 그룹에 의한

각 그룹의 상호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오너십이다. 당연히 글로벌화를 내세우는 거대 미디어는 거대 기업들이 통제한다.

사실, 한국공영방송은 이름만 남은 빈 깡통이다. 한 발 후퇴해서 글로벌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다고 치자. 방송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작해서 방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방송사 이름을 대표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브랜드 가치니 어쩌니 들먹일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 방송은 이처럼 방송사의 정체성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 빈 깡통에 불과한 방송사 이름을 걸고 정치적 게임에 빠져 방송의 독립성 저널리즘의 독립성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의무주제제작비를 채우기 위해 제작된 작품들은 제작사와 공동소유가 아니다. 이는 방송사가 투자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무자비한 시청각 시장의 자유주의에서 비영리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의무는 시대에 뒤떨어진, 비상식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솔직한 표현으로 이런 상황에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제도 개선, 이사회 구성, 예산지원, 공영성 강화 다 헛구호에 불과하다. 결국 기존의 방송사와 정치권력의 암묵적 명시적 손잡기, 저널리즘의 정치종속은 신문과 방송의 협잡 대항 경쟁으로 미디어 지형을 혼탁 혼란하게 만들 뿐이다. 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의 팽창, 맹목적 추종은 제3의 길이라는 또 다른 합리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트러스트(신뢰Trust)’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신뢰라는 것은 한낱 권력과 자본 간의 협잡과 음흉한 공모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니 이 신뢰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그나마 BBC가 말 그대로 그들의 Trust를 지켜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BBC의 힘이다.

국내 방송사는 어떠한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할 것 없이 프로그램 제작은 상품화하면서 질적 차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었다. 이 속에서 엄청난 개런티를 보장 받는 소수의 연기자, 비정규직 조차도 부러운, 착취당하는 대다수의 제작 인력들 간의 양극화, 기존 PD를 포함한 좌불안석의 방송사 제작자의 현실이 상존해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소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본의 기획사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사의 정체성 문제와 그 존재 가치를 억지로 확인하는 불공정 거래 등이 존속되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환경은 타국에 콘텐츠 판매를 확대하며 자국 내의 제작비를 조달하는 미국의 제작 시장에 종속되며 이는 국내 제작 시장에서의 자본 종속과 노동력 착취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치열하게 벌인 논쟁 중의 하나가 다원주의와 다원성 확보에 대한 상반된 견해다(이상훈, 2011).

4) 크로스 미디어(Cross-Media)와 자본 축적 구조 강화

지배적인 미디어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를 고무하고 시장의 가치를 확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거대 미디어들은 그 조직과 운영 자체가 바로 자본의 글로벌화와 글로벌화한 자본의 이익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당연히 글로벌화를 내세우는 거대 미디어는 거대 기업들이 통제한다. 국내의 종합편성채널 허가에 따른 미디어 교차소유와 미디어 집중, 그리고 거기에 진입하는 대기업 자본의 성격은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인쇄매체가 처한 상황은 어느 나라나 다 유사하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역시 디지털 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융합환경은 기존의 인쇄매체에 상당한 부담으

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로는 언론 권력으로서, 때로는 정치적 기생 세력으로 존속해 온 조중동 인쇄매체는 자본권력과 결탁하여 활로를 모색하게 되고 여기에 신자유주의 경향은 방송시장 개방과 겸영 허용이라는 날개를 달아 준 것이 종합편성채널 설립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하에서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문제나 거대 통신사나 부도덕한 대기업의 자본 유입에 따른 미디어의 자본 종속 문제가 종편의 핵심은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을 통해 새롭게 자본을 축적하는 지배적 모델 구축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롭게 노동을 착취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일 역사 진보가 있다면 바로 이들이 그 진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허울뿐인 지상파 공영방송사와 종편 간의 발전적 경쟁의 시나리오는 농담이 되어버린다. 자본이라는 한 손의 칼, 공익이라는 다른 손의 방패가 왜 경쟁을 할 것인가? 이 ‘낭비적 경쟁’(Nove, 1991, 대안체제연구회 역, 2001)을 피해 ‘협잡과 공모’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제 이들은 완벽한 미디어 권력자 집단이 되어 버린다.

3. 신자유주의와 공공영역의 변화

공공영역을 규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역사적으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표현대로 공공영역은 시대적으로 규정되는 카테고리인 것인 것이다. 공공영역은 민주주의의 기능의 핵심이다. 사실,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도 억압적이다 그러나 진리는 편파적이라는 언술에 동의한다면,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억압적인만큼 반신자유주의와 공공영역의 확보에 대한 논의는 중립적이기 보다 참여적이고 편파적이어야 한다. 특히나 우리의 미디어 영역은 공공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오히려 가깝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확장이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차라리 이제 제대로 공공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미디어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 통일 필요한 것 같다. 미디어 영역이 공공영역이 아닌 특수한 사적 영역으로의 변질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진단과 함께(최근 SBS의 홀딩컴퍼니와 미디어랩 설립이 한 예다) 미디어 공공영역을 만들어내는 운동과 정치적 기획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공론장의 구분과 미디어영역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언론이 신자유주의하에서 이데올로기를 상품화하는 등, 이런 특성이 어떻게 공적영역이 될 수 있는가? 현재의 미디어 체제가 이런 성격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공공영역의 의미, 또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1) 공공영역의 변화: 공공영역의 사적영역화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의 정의는 어쩌면 칸트의 이성의 사적 사용의 무한정한 확장²⁾을 경계하며

2) 칸트의 사적인 것에 대립하는 공적인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사적인 것은 개인적 특수성의 공간이며 공적 공간은 다른이들을 해치지 않기 위한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이며 연대의

국가를 또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두고 사적 공간 내부에서 자유로운 이성의 공적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있어야 되는 공공영역이란 공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공영역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부르주아의 개인적인 이성의 사용과 상업적·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여망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은 권위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영역을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비판이 행해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 이런 비판은 합리적이며 계몽적인 토론과 논쟁에 의해 발전되고 여론을 전파하는 언론과 신문을 통해 확대된다. 이 결과 부르주아 영역에서 비판적 토론을 통해 재탄생되고 진정한 공공영역이 형성된 것이다(J. Habermas, 1984). 공개적으로 도시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을 야기하면서 부르주아는 법복사회의 절대적 권력에 대한 진정한 반권력, 대항권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현대사회는 서로 상반되는 두 영역인 개인과 대중 간의 모순을 경영해야한다. 따라서 사회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갈등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경영하는 균형을 잡는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영역의 개념은 우선 철학의 영역, 정치의 영역 그리고 법의 영역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는 현대에 와서는 정보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영역, 그리고 도시 사회학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공영역은 사회적인 삶이 신념과 민주주의의 모델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B. Miege, 1989 : 105)

미디어영역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계급의 형성(당시 부르주아 공공영역)과 함께 사적 영역과 공권력 영역을 이어주며 공권력 영역의 확장에 필요한 사적 영역의 참여 확대를 매개해주고 이끌어주는 사적영역 내의 공공영역이다. 그러니 이 미디어 영역은 칸트의 표현대로 사적 영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성의 공적 이용이 일어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이 사람들 사이에 계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역할의 축소와 시장영역의 자유화 확대로 성격지울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아이러니하게 국가의 사적 영역의 특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사적 영역과 공공영역을 동시에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인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고 국가나 정부는 ‘인공적 질서’다. 그런데 자생적 질서와 인공적 질서를 강제로 결합할 경우 자생적 질서가 파괴된다. 하이에크의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역설적으로 시장은 엄청나게 국가가 개입하는 인공적 질서가 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공공영역은 자생적이고 자발적 질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은 같다. 이 상황에서 인공적 질서와 자생적 질서가 강제로 (그러나 종종 자발적으로) 결합할 경우 자생적 질서는 파괴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하에서 공공영역의 소멸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생성되고 형성되는 공공영역의 특성을 이성의 특수한 사적 이용을 통한 시장의 인공적 질서가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그 모습이다.

미에지(B. Miege, 2010)는 공공영역의 문제를 4가지 계통의 주요 전통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표 1> 참조). 물론 이 4가지 전통은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나 이제 각 전통이 자율적으로

공간이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광범위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자유주의의 흐름이라면, 반대로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화로부터 끊임없이 본질적인(칸트적 의미에서) 공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아이러니한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은 이런 아이러니를 두고 하는 말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은 독단적 전제들에 구속되는 이성의 사적 사용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크게 보면 정치적 이익집단은 사적 영역이 되며 이를 확장하여 국가 역시 나름대로 사적 영역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S. Zizek, 2009).

가능하면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운동의 틀에서 부르주아 공공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의 의미나 자율적 조직의 생성 형태를 생각하면,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공공영역의 기반이 되는 대항적, 대안적인 공공영역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공공영역은 현대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폭발의 순간, 혹은 기존의 공공영역에 부정적인 순간에서 형성되는 공간을 강조하고 이해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 미디어 공공영역으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공공영역의 형성과 맞물리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 할 수 있다.

<표 1> 공공영역의 4가지 계통의 기본적 특성(B. Mieke, 2010)

계통	공공영역	사적영역
그리스 사상 (H. 아렌트)	공통적이며 의사결정적인 공간	사적공간(가족+일)
계몽사상 (J. 하버마스)	여론과 토론의 공적 행위 공간(정치적 공공영역)	배타적이며 독점적 영역+사회적 영역과 점점 더 분리되는 사적 공간
자유 사상	중재(계)적인 공간	사적 여론의 공간
대항적, 대안적 사고	정치적 공공영역에 자극을 주고 정치 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대항(적) 공간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역+사회적 영역

바디우(Badiou, 2007)는 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락의 두 가지 유형(차원)을 구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상 경험적 타락과 정치를 사적 이해 관계들 간의 협상으로 축소시키는 민주주의 바로 그 자체가 지니는 형식에 속하는 타락이다(Badiou, 2007). 특히 사회적 총체적 소통의 위기에서 언론의 문제는 ‘독립’의 위기다.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서 언론이 자본과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 자기 소신껏 주장할 수 없는 독립적 언론의 부재가 문제인 것이다. 그 이유로는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이해 부족, 그리고 사회적 수주에서의 총체적 소통 위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는 우선 일반 대중들에 의한 담론의 생산과 배급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담론으로서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 정도 증가 및 양방향성의 증가로 소비자의 취향과 의도가 생산물에 반영되고 있다. 더 이상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아니며 이는 후기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공공영역의 붕괴, 소멸을 이끈다(표 3).

① 개인, 부르주아는 합리적 소비,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의 위치가 중요시 되고, 방송과 신문은 광고로 전략, 오락의 기능과 자본 권력에의 종속이 가속화하고 내재화 되어 공공영역의 시장화가 확대된다, ② 테크노크라트 권력, 공공영역의 사적 권력화 강화 수단, 정치권력의 사적권력화 심화, 공공영역의 정치권력예로의 종속이 이루어져 이성의 사적 사용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심화된다. ③ 비판적 힘의 소멸, 담론 콘텐츠 질의 저하, 공공영역의 소멸의 길로 접어든다. 특히 정보 수집의 합리적 기능으로서의 저널리스트의 기능은 정보 생산과 점차 생산의 독점화를 거치며 마지막 단계로 정치 권력 자본 권력과의 연계, 정보 생산의 규격화, 권력과의 공모로 공공영역은 명목만 남아 있게 된다.

<표 2> 공공영역의 사적영역화 구조 변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사적영역화		
시민사회 영역		정치사회 영역
시민사회(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공간) 공동체적 동일시 공간 자본의 사적영역 (주관적 부르주아, 수동적 개인) ①	⇒ 공공영역 (파편화, 분화, 시장화) ③	← 국가, 정치영역의 사적영역화 공적권력 영역 (자본가, 정치인, 테크노크라트) ②

여기서 공권력 영역인 국가는 결코 독립적인 권력이 아니다. 특히 신자유주의하에서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의 모순적, 갈등적 수준에서의 특수한 권력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 군사적 동맹관계, 제적 블록(예를 들어 FTA 등과 같은)을 통해서 국가 자체가 독점적 권력화하고 또 그 독점을 정당화하는 특수한 사적 권력이 되는 것이다.

2) 새로운 대안적 공공영역 구축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

이제 사회 변혁은 단지 어떤 대의를 지지하는 다수 대중을 결집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사회적 관계들이 재접합되고 파격적인 또는 전복적인 실천들에 의해 새로운 개념적 지평이 열리는 방식을 통해 일어난다(J. 버틀러, 2000).

프롤레타리아의 등장, 그것이 공공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은 계급적 상황에서 부르주아 계급에 반대되는 계급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주관적 아비투스(habitus subjectifs)로서 해석되는 삶의 형태로서의 사회가 등장함을 말하는 것이다. 콩트(A. Comte)는 공적 공간에서의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의 존재는 사회 속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규범성에 적합하도록 정치권력 영역에서의 뜻하지 않은 출현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콩트가 보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물질적인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공중의 프롤레타리아화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주관적 아비투스의 개념은 무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쩌면 이러한 현대의 프롤레타리아들은 부르디외가 사용한 아비투스의 중세적 의미, 즉 습관(habitude), 실재(exis), 획득(aquis) 그리고 능력(faculté)이 결합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Rist, 1984)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적 공공영역 구축을 위하여 부르주아 공공영역과 상반되는 하나의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Negt & Kluge, 1993)과 워너(Warner, 2002)의 대항적 공중(Counter public)의 논의를 참고해 볼 수 있겠다.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다중적,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며 여기서는 집합적인 경험이 조직되며, 특수하면서도 다원적인 것이다. 정치적

장에서의 권력 작용을 단지 정책 현안을 통제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상이한 진영들의 견지에서만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표 3> 새로운 공공영역의 구축

사적 영역 및 공적 권력 영역		대항, 대안적 공공권력영역
⇔	⇔	
시민사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공간) 공동체적 동일시 공간 (주관적 부르주아, 수동적 개인)	정치경제권력의 영역 글로벌 미디어사회 (기존 미디어, 뉴미디어) 내적 헤게모니 공간	non-public 영역, 투쟁적, 갈등적 공중, 대안적 혹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개인, 부유하는 지식인)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란 프롤레타리아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는 조직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공공영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민중참여의 새로운 형식들에 의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젤슨(Jeanson, 1972)의 ‘비공중(non public)’의 전략이나 랑시에르(Rancière, 2008)의 ‘해방된 청중(le spectateur émancipé)’의 개념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비공중 전략은 새로운 공공영역의 확립을 위한 역설이다.

예술의 장에서 공중(public)과 비공중(non public)을 구분하면서 예술과 공중과의 관계의 확장은 더 이상 우선적인 매개가 아니며, 이제는 구체적인 인구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젤슨이 제안하는 비공중으로 향하는 전략의 의미이다. 랑시에르의 해방된 청중은 스펙타클과 분리되고, 매개되어 수동적으로 관전하는 청중이 아니라 스펙타클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관중이다. 해방된 청중은 스펙타클과 이미지에 의해 매혹당하고 빠져들어 속박되는 청중이 아니라 새롭게 스펙타클을 창조해 내는 에너지와 능동적 권력을 의미한다(Rancière, 2008). 이 권력 위에서 단순한 집합으로서의 청중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인들이 이루는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관점이 서로 모순되는 여러 구체적인 집단들이 동일한 현실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하임(Mannheim, 1990)의 지식사회학적인 관점을 원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는 같은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관한 지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하버마스의 상호이해, 소통행위의 과정이기도 하고, 헤게모니의 동의 과정이기도 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 지식은 여러 다른 관점을 통합시킬 때 더욱 풍부해지고 더 포괄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 과정의 수행자와 담당자는 누구인가? 만하임은 얽매어있지 않은 인텔리겐차, 부유하는 지식인, 자유로이 떠다니는 지식인의 역할을 도입한다(Mannheim, 1990). “우리가 현존하는 사상의 흐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얽매이지 않는 중간계층이 존재하여, 이들이 자기 각색의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회계급과 집단들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개인들에 대하여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러한 조건들 하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언급했던 끊임없이 신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종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Mannheim, 1990)

그러나 이러한 지식사회학적 차원과 함께 다양한 집단과 그들이 지니는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의 의미를 두고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사실 모든 공공영역은 무엇보다도 우선 공통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 공간이 공통적인 것이 되는가? 미디어영역은 특히 어떻게 공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공공영역 속에서 공통적 공간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서로 근접해지지만 동시에 공통이기 위해 친밀해지는 것에 핵심인 거리감의 소멸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거리감의 소멸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보편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즉 분열의 정도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Tassin, 1992).

공공영역 속에서 구성될 수 있는 커뮤니티는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커뮤니티는 그 스스로 닫힌 공간이 된다. 공간이지만 닫힌 공간이고 배타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와 반대로 이 공간은 외부의 보편적인 세상으로 열리는 공간일 수 있다. 보편적인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밖으로 개방되어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물론 외부, 혹은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일정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가변적이며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공간은 구축되는 공간이고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논쟁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공공영역이 된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통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으며 이 공간이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다시 회복가능한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이야기하면서 현대 사회의 수많은 부분, 집합, 이익집단화, 그래서 공공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화하는 이중성의 문제가 이 속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대항적이며 새로운 미디어영역의 구축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공공영역의 구축과 공공 미디어영역에 관해서,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할 때 어떠한 주요 변화가 있었나?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는 어떠한가? 신자유주의가 이끈 미디어 환경에서의 주요 상황은 무엇인가? 이를 신자유주의하의 권력과 그 권력을 정당화했던 기제를, 지배적인 의미,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논리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의 공공성, 공공영역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과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고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편협하고 탐욕적인 기득권의 지배적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이러한 거부를 가능케 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정보사회의 다양한 개인화들이 공간에서 통합되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결합으로 이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갈등이 드러나는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사적인 사회적 관계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형성되고, 존재와 노동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벡(Beck, 2005)이 지적하고 있는 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정체성, 새로운 사회 운동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분리 속에서 전체적인 삶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유연하고 다원적이며 동시에 개인화된 시스템과 대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동안 고착된 상태에서 규정되던 이러한 상황들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 다니게 된다(Beck, 2005).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유주의하에서 공공영역의 소멸과 새로운 공공영역 구성의 필요성과 그 가능

성이 헤게모니 이론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헤게모니는 권력 작용하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가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그런 암묵적이고 은밀한 권력관계에 동의하고 그것들을 재생산하게 되는 방법들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푸코(Foucault, 1975)의 권력의 미시물리학에 따르면 권력은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되고, 그 권력의 지배효과가 어떤 ‘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치관계, 조작, 전술, 기술, 기능에서 오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또 따라서 우리는 권력 속에서 우리가 수중에 넣고 있는 어떤 특권보다는 언제나 팽팽하게 긴장되어있고 언제나 활동 중인 어떤 관계의 망을 판독해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래서 그런 권력이 따르는 모델은 어떤 양도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나 무슨 영토를 점령하는 승리 같은 것보다는 영원한 전투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Foucault, 1975).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기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다양한 공공영역이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무한한, 한계 없는 절대적 지배로 이해한다. 그람시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적 단계”는 부르주아지가 단순히 그들의 억압 수단을 통해 지배하지 않는, 그러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는 역사적 시기에 상응한다. 왜냐하면 헤게모니 단계는 정치적 지향, 방향순수한 협력, 다시 말해서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동의(Gramsci, 1999)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와 무페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서 확립한 헤게모니의 관점은 민주적 정치체가 배제를 통해 구성되며 그 배제가 배제의 부재에 입각해 있는 정치 체에 되돌아와 그곳을 떠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utler, Laclau & Zizek, 2009 p.28). 그런 배회는 바로 배제된 것의 귀환을 통해 민주주의 자체의 기본적 전제들이 확장되고 재접합될 수밖에 없는 한에서 정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Butler, Laclau & Zizek, 2009).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촛불시위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공공영역의 미디어 성격을 규정해 줄 수 있는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에 대항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촛불시위는 보편적 가치에 직접 참여하는 이성의 공적 활용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정치적 접합가능성의 장애구조, 제약 요건들이 이론적으로 중층 결정됨으로써 차단된다면, 헤게모니의 정치적 기획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와 구조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영역으로서 공영방송사의 개혁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변화 가능성이 차단됨으로써 새롭게 현 정치체제와 역사와의 관계를 재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공공영역의 구축, 최소한 공영방송사 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전면적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상이한 우연적인 집단에 의존하는 ‘급진 혁명적인 등기논리’와 진보적인 의제를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련의 특수한 사회적 문제들로 환원시키는 수정주의(현실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조합주의 전망 간의 선택이 아니라 이 두 가치를 방식을 달성하는 논리와 맞닿는다.

이것이 결국 현재 공공영역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신자유주의를 궁극적으로 전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대안적 공공영역 속에서 공영방송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다. 어쩌면 불가능하게도 보이는 보편성 획득의 기도와 동시에 보편성을 체현하는 한 영역으로서 공영방송조직이라는 특수한 조직, 특수한 공공영역(미디어 공공영역)에 기대어 가는 해결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희망일 수 있는 것이다.

4. 결어

새로운 공공영역과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의 지형을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 공공영역이 점점 더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상징적인 공간화로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토양이다. 토양이란 역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토양이란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마치 알튀세(Althusser, 1976)가 프로이드에게 무의식은 영원한 것처럼 이데올로기 역시 영원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배의 본질은 기술적인 통제력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집단적인 삶을 위협하는 지배의 비합리성은, 보편적이고 억압을 받지 않는 토론의 원칙을 준수하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것이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창출이며 정치적 공공영역(political public sphere)의 복원과 활성화인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의 예를 들어보자.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암묵적으로 뒷받침한 논리는 베버의 관료제다. 관료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리성의 이름으로 통제, 유지키 위한 운영 논리에 다름 아니다. 합리성과 효율적 관리가 산업자본주의의 방식을 지탱하면서 부드러운 억압을 행사하는 기제였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자본 체제와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억압은 합리성과 테크노크라트 관료체제를 통한 헤게모니적 관리 방식에서 다시 현재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는 자본과 기술 흐름 속에서 유연한 것처럼 보이는 억압의 기제로 진화하고 있다.

부르주아 공공영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 상품화 되는, 새로운 기술 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는, 또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사적인 것은 공동체적 유대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개인적 유대가 아니라 바로 특수한 동일시의 공동체적-제도적 질서(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특수한 질서-를 예를 든다면, 이 체제를 옹호, 이 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논리로 움직이는 제도 내에서의 공동체적 질서)를 지칭하며, 공적인 것은 이성의 행사의 초국적 보편성을 가리킨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 체제를 포함한 미디어영역이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공적 영역을 이성의 구속받지

않는 행사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의 한계, 사회적 존재의 질서 내의 우리의 위치가 지니는 한계 바깥에 있는 해방적 보편성의 차원을 환기하고 있다(Zizek, 2009). 지적의 또 다른 논점에 따르면, 보편성 담화의 전개를 통해 일어나는 헤게모니 전투는 일반적으로 그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라는(그 이전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정보사회라는) ‘배경을 고려하는 데 실패한다. 복지국가 모델이 붕괴한 이래 주로 문화적인 좌파들이 경제적 쟁점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이다(Butler, Laclau & Zizek, 2000/2009).’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공공영역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로 차 있으며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립적인 시민의 집합으로 축소할 수 없다. 공공영역에 편입되었다는 말은 거기서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갈등, 다른 입장, 불명확에 대한 믿음, 그들의 변화를 각오하고, 변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공공영역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영역과 민주주의는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을 통하여 매일 매일 획득하는 것이며 이러한 때 이것들은 집합적으로 신념과 가치(노동, 경제, 경쟁, 시장, 복지 등)가 반영되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또 언제나 조합되고, 해체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제도의 목표는 공공영역 속에서 합리적인 동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적대감의 잠재적 중지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단지 적대적인 것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것으로의 변모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Mouffe, 2000)”라는 무페의 말이 의미 있게 와 닿는다. 이제 공공영역은 사회적 지위, 계층, 권력에 종속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의 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대와 사회적 관계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Ⅰ 참고문헌

-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 외 역. 이음.
- 이상훈, 문성철 (2009). 프랑스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방송구조의 개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권 2호, pp.109~160.
- 이상훈 (2011). 신자유주의시대의 방송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미디어 정책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pp.385~416.
- Althusser, L. (1976). *Position*. Paris, editions sociales.
- Badiou, A. (2007). *De quoi Sarkozy est-il le nom?*. circonstances, 4. NE Lignes.
- Beck, U. (2005). *Power in the Global Age*. polity press.
- Bobbio, N. (1979). Gramsci and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Chantal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Routledge. 장상철, 이기용 역 (1992). 『그람시와 마르크스주의 이론』. 서울: 녹두.
- Bourdieu, P. & Haacke, H. (1994). *Libre-échange*. Paris, Seuil.
- Butler, J. Laclau, E. & Zizek, S. (2000).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NY: Verso. 박대진 외 역 (2009).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서울: 도서출판.
- Correia, N. (2011). Quelles garanties pour l'indépendance des Media?, *Mandariaga college of the Europe*.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a, Sage, London.
- Endeweld, Marc. (2010). *France télévisions: Off de record*. Paris, Flammarion.

- Ferry, J-M. (1987). *Habermas, L'éthique de la communication*. Paris, PUF.
- Ferry, J-M. (1994). *Philosophie de la communication*. Paris, Cerf/Humanites.
- Habermas, J. (1978). *L'espace public, Archeologie de la publicité comme dimension constitutive de la société bourgeois*. Paris, Payot.
- Habermas, J. (1987). *Théorie de l'agir communicationnel, Rationalité de l'agir et rationalisation de la société*. Paris, Fayard.
- Halimi, S. (2005). *Les nouveaux chiens de garde*. Paris, Raison d'agir.
- Jeanson, F. (1972). *L'action culturelle dans la cité*. Paris, le Seuil, pp.136~141.
- Mannheim, K. (1990). *Ideology and Utopia*, 황성모 역 (1990).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삼성문화개발.
- Miege, B. (2010). *L'espace public contemporain*. PUG, Grenoble.
- Moeglin, P & Tremblay, G. (2005). *L'avenir de la télévision généraliste*. Paris, L'Harmattan.
- Mouffe, Ch.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 Negt. O. & Kluge, A. (1993). Public sphere and Experience, Toward an analysis of the Bourgeois and Proletarian Public sphere, UMP.
- Nove, A. (1991).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Revisited. 대안체제연구회 역 (2001).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미래』. 서울: 도서출판 백의.
- Rancière, J. (2008). *Le spectateur émancipé*, éd. La fabrique. Paris.
- Rist. G. (1984). la notion médiévale d'habitus dans la sociologie de Bourdieu, *revue européenne des sciences sociales*. Geneve, Droz.
- Rzepski G. et Maler H. (2007). L'audiovisuel dans le collimateur de la droite. *décomplexée*. Publié le 10 octobre.
- Rzepski, G. & Maler, H. (2008). Télévisions publiques en péril, pluralisme en danger Mascarade pour un massacre? *Acrimed*, juin.
- Warner, M. (2002). *Public and Counter Public*. NY, Zone Books.
- Wolton, D. (1989). *La communication politique: construction d'un model*, *Hermes*. Paris, CNRS.
- Zizek, S. (2009).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 London. 김성호 역 (2010).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서울: 창비.

(투고일자: 2011. 11. 30, 수정일자: 2012. 1. 26, 게재확정일자: 2012. 1. 27)

ABSTRACT

The Public Television Crisis and the Mut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Neo-liberalism^{*}

Sang-Hoon Lee^{**}

In neo-liberalism, the change-value of the market and of the machandise based on the individual as the consumer dominate the public sphere, and the capital power encroach on it. with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At the same time the public sphere as such represent the media sphere, which is more and more subordinate, and have no choice but to do to the governmental authority having political power privatized. The private usage of reason in the public sphere is carried out at the structural level. How can we call such a space in which the private usage of reason is generalized and dominant as the public sphere? And so now, we sound out the possibility of the public sphere such as a new space of the universality where the public usage of reason can be realized without any limits and with free. So, when we imagine the proletarian public sphere, in which co-exist the divers private interests, as a new public sphere capable to be constructed, we can address a question as follow.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letarian public sphere in modern society?, Is the public community able to be formed and realized in such space? How would have the proletarian public sphere the carateristics of the publis sphere? What is the attribute of the community that the proletarian public sphere would make, and what is its force of emancipation? The power is no longer stable and static. Rather, it is reconstructed and reorganized in the divers phases of the everyday life. It is the reason why we put on the order of the day the proletarian public sphere as alternative public space, which would be a place of divers hegemonic representation. And now, we are aware of the beginning of thses changes.

Keywords: Neo-liberalism, Public Sphere, Proletarian Public Sphere, Public Media Sphere, Hegemony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 Journalism, Jeonbuk National University